

육아정책 소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년 핵심점검·평가과제 현장 점검 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6일(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는 1년에 한 번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평가보고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성과평가 및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평가시스템 도입, 전체 과제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이행관리 개선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까지 매년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계획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2016년 핵심 점검·평가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세부과제 1)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 초등돌봄교실, 3) 난임시술지원, 4) 고령자 사회참여(전문자원봉사, 재능나눔)를 대상으로 과제 이행의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모색,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확산 모델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교육청-지자체 간 예산 편성 협의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7월 5일(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재정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5일 공포·시행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사항 〉

- ①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 협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 (제8조 제1항)
- ②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제8조 제4항 및 제5항)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이 지자체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추경 예산안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증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7월 22일(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1.9조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원 증액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 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동 재원 등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 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어 재정 여건이 확충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8월 10일(수)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13.2.22)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사항 〉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
-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를 포함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유치원을 추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초·중등 교원 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평가 영역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포함하고, 평가 방식은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원장이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게 되며, 교원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기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사소통 증진으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8월 30일(화)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주요 교육정책사업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거쳐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5조 7,459억원에서 4조 9,113억원 증액(8.8%)한 60조 6,57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16년 대비 4조 6,740억원 증액(11.3%)한 46조 1,859억원이 편성되었고 중점 편성 방향은 1)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2) 인성·진로 교육 강화이다. 세부적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인성교육진흥사업에 6.5억원을 편성하여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수립(16.1.19.)에 따라 인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 인성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9월 1일(목)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16.5.29.)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일(목)부터 10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변 개정안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2017년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안이 2016년 21조 4,547억원에 비해 1조 13억원 증가(4.7%)한 22조 4,560억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밝혔다. 분야별 구체적인 예산 및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17년도 정부예산(안) 〉

(단위 : 억원)

사 업 별	'16년 예산(A)	'17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가율 (%)	비고 (주요 사업 증액/감액분)
저출산 대책	214,547	224,560	10,013	4.7	
1.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36,375	50,141	13,766	37.8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1.2조 증액 - 창업성공패키지 500억원 증액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764	13,087	1,323	11.2	- 난임시술지원 480억원 증액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560억원 증액
3.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158,833	152,506	△6,327	△4.0	-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2,570억원 감액
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7,575	8,825	1,250	16.5	- 육아휴직 지원금 1,105억원 증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되는 초등돌봄사업은 '17년 예산 규모가 약 4,048억원으로 추정되나, 시·도교육청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17년 저출산 대책 정부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음.

※ 초등돌봄예산 추정치 4,048억원 포함시

'17년 저출산 대책 전체 예산안은 22조8,608억원으로 1조4,601억원(6.6%) 증가

'17년 돌봄 관련 예산안은 15조6,554억원으로 2,279억원(1.4%) 감소